

광양항, 호남권 지역 항만 전략 위기

국회 '2006 결산 분석'서 제기 신항만 개발 예산 집행실적 쫓겨 수도권·충청권 물동량 처리 급감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됐던 광양항이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의 급성장에 따라 호남권의 물동량을 주로 처리하는 '지역 항만'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당초 33선석(일반항 1선석)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광양항이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부진에 따라 지난 2006년 12월 20선석(일반항 4선석 제외) 규모로 축소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의 활성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6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토대로 광양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해본다.

◇저조한 개발·물동량 처리=지난 2004년 67%, 2005년 80%, 2006년 81%로 신항만 개발사업 가운데 예산집행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2006년도 항만계정 전체 예산집행실적인 91%에 비해서도 10%포인트나 낮았다.

부산신항의 경우 2004년 85%, 2005년 92%, 2006년 96%로 예산집행실적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어 광양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광양항의 물동량 처리 실적은 2003년 9.7%, 2004년 9.2%, 2005년 8.3% 등 10% 이하의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6년 21.2%의 반짝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올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에 그쳤으며 환적 물동량은 오히려 21%가 감소했다.

◇실적 부진 원인=우선 수도권 및 충청권의 물동량의 처리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편리한 배후 수송망과 50여 개의 산업단지를 인근에 두고 있어 수도권과 충청권의 물동량이 광택·당진항과 인천항에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광양항의 지역별 수출 컨테이너 화물 처리 비율을 보면 호남권에서 발생한 물동량의 처리 비율은 2001년 51.8%에서 2004년 63.3%로 증가했다.

그러나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발생한 물동량의 처리 비율은 2001년 각각 9.5%, 18.1%를 기록했으나 2004년 각각 3.0%, 15.7%로 감소했다.

특히, 정부는 광택·당진항과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컨테이너 선석의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

는다면 광양항은 호남권 물량을 주로 처리하는 '지역 항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수출입 물동량과 환적화물의 증가 추세가 둔화하고 있는 점도 광양항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

◇광양항 활성화 방안=우선 배후단지 개발 예산을 대폭 확충, 2015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완공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부산항과 광양항의 통합 운영을 통해 윈-윈 게임을 모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두 항만이 상호 협력, 장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거나 단일 운영체제가 두 항만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또한, 다국적 물류 기업의 유치와 중앙정부의 지원시스템 강화, 배후 수송체계의 조속한 확충 등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부산항과 함께 우리나라 양항(兩港·Two Port) 정책의 양대축인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가 물동량 감소로 군데군데 비어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亞문화중심도시 신임 추진단장 이병훈씨 전남도 다년간 근무...지역사정 밝아 광주시와 의견 조율·협의 원활할 듯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리인 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에 2일 이병훈 국가균형위 평가제도국장이 임명됐다.

지난 2월 말 이영진 전 단장의 사임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인사여서 향후 이병훈 신임 단장의 역할과 활동에 광주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진단장의 역할이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행정 총괄은 물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문공부-지역간 소통에 있는 만큼 광주시와 지역 시민단체, 문화계 인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공부는 이영진 전 단장이 문공부, 광주시나 문화·예술단체와의 가고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고, 외부 인사 보다는 공직사회 내부를 잘 아는 현직 공무원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장은 전남 출신으로 다년간 전남도청에서 근무해 지역 사정에 밝은 데다 문공부 업무는 물론 대규모 국책 사업에 정통한 인사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광주시도 이병훈 단장의 임명에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단장의 임명으로 인해 향후 문화중심도시사업 집행 과정에서 문공부와 광주시의 의견 조율 및 협의는 예전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단장은 전남도청 재직 시절 업무상 시민단체와의 접촉이 빈번했기 때문에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문공부와 광주시, 지역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화전당 랜드마크 기능과 관련해서는 그가 어떤 해법을 찾을 것인가가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랜드마크 문제는 문공부가 제시한 현 설계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 광주시와 지역간 의견을 수렴해야만 해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단장에게는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단장은 지난 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민지원본부장으로 재직시 행복도시 토지 매입과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등 신규 국책사업 추진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문화전당 랜드마크 보완 지역 목소리 귀 기울일 것”



이병훈 문화수도추진단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전당 하나 짓고 끝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지역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에 임명된 이병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제도국장은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설레고, 지역민들의 기대가 커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추진단장은 “지금까지 문공부와 지역의 소통이 원활치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역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은 물론 지역의 시각을 세계 수준에 맞출 때 문공부의 시각도 전당 건립에 국한하지 않고 아시아 최고의 문화도시를 건설하는 방향에 맞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문화전당 랜드마크 논란에 대해서는 건축가의 작가정신을 존중하되 시

민들의 바람과 지역경제와의 연결성 등을 고려해 보완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에펠탑이 건립될 당시 대부분의 파리 시민들이 '미친 짓'이라며 반대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랜드마크는 반드시 크기로 결정되거나 시민들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 여론이 납득할만한 것이고, 시의 대안 제시가 합리적인 수준이어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단장은 또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이라면서 “문화전당의 활성화나 지역경제와의 연계 효과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건물 유지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추진단장은 “건축이든 도시정비든 모든 행정이 문화도시를 가꾼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추진돼야 도시가 바뀐다”고 덧붙였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민주 중심 소통합으로 정권 창출 못한다”

박광태 광주시장 취임 1주년 간담회

박광태 광주시장은 2일 민주당과 통합신당 중심의 ‘소통합’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대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권 창출이 가장 큰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대통합을 통해 좋은 후보·단일후보를 내야만 결국 (한나라당과의) 양자구도를 형성, 막판에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민주당 중심의 소통합은 정권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난하고 “대통합을 통해 시·도민에게 (정권 창출이라는) 선물을 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 이후 오찬에서도 “전날 저녁 광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김효석·이낙연·신중식·채일병 의원, 정균환 전 의원 등과 만나 대통합 방안을 논의했다”며 “때가 되면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 김

원기 전 국회의장 등 모두와 통합하는 큰 그림을 그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박준영 전남지사와 함께 박상천 대표를 만나 대통합하자고 설득했으나 일이 잘 못했다”며 “정권 창출에 실패하면 시·도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박 시장은 담양군 일부 주민들의 광주 편입 운동에 대해서는 “광주 근교 도시와의 경제권 통합을 위해 제3순환도로 개설 등 신 메트로폴리탄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도, “행정 통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몇 년 전 장성에서도 광주 편입 움직임이 있었지만 안됐다”며 “현 행정체제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산하 공기업 이사장이 광주 편입 대책위원회에 선임된 것과 관련 “시의 뜻이 아닌 만큼 곧바로 사임토록 권유했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inews@kwangju.co.kr

“완도~제주 해저터널 국가적 과제 추진”

박준영 전남지사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박준영 전남지사는 2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을 한국과 중국, 일본을 아우르는 국제 해양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완도~제주 간 해저터널(80km)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완도~제주 간 해저터널은 전남을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천문학적 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 제주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 국가적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따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해저터널은 완도 보길도~추자도~제주를 잇는 80km 길이로, 총 사업비는 25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완도~제주 간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현재 배로 3시간 30분 걸리는 것이 자동차로 1시간 내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

다.

한편, 박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후속 대책은 오히려 농촌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농촌사회의 교육과 정주여건, 복지, 문화 분야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이어 최근 임시국회에서 F1 특별법이 무산된 것과 관련 “법안에 대하여 3당이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소위원장 문제와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 연계 등 전남도의 영역을 벗어난 요인 때문”이라며 “다음 국회 회기 때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7월 중 경주장 건립은 특별법 제정과는 별개로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기관간 협의 과정이어서 진전이 없는 듯 보이지만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무역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TNET은 무역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전남)지역 전자무역 발전 세미나

- 1. 전자무역의 중요성과 현황
- 2. 전자무역의 발전 방향
- 3. 전자무역의 활용 방안
- 4. 전자무역의 보안 대책
- 5. 전자무역의 법적 문제
- 6. 전자무역의 국제화 전략